

보도	2026.10.26.(월) 조간	배포	2026.10.23.(금)		
담당부서	민생침해대응총괄국 불법사금융대응1팀 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	책임자	국 장	임정환	(02-3145-8270)
		담당자	팀 장	장종현	(02-3145-8129)
			팀 장	김민형	(02-3145-8280)

교리 자르기 사채 조직, '몸통'까지 쫓는다

- 시로 들어진 신고 연결, 숨은 피해 · 연루 대부업체 잇따라 포착 -

< 개 요 >

- 금융감독원은 그간 축적된 불법사금융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조직범죄 수사를 지원할 AI 기반 분석체계를 마련했습니다.
- 이번 분석체계는 산재된 피해 신고를 묶어 그 뒤에 가려져 있던 범죄조직의 실체를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.
 - 동 분석체계 운영 결과, 묻혀 있던 피해가 대거 수면 위로 떠올랐고, 정식 등록업체가 불법 영업에 가담한 정황까지 포착됐습니다.
- **작은 제보 하나**가 조직 전체를 밝히는 **결정적 단서**가 되는 만큼, 피해를 받으면 망설이지 말고 **금융감독원**에 **신고**해 주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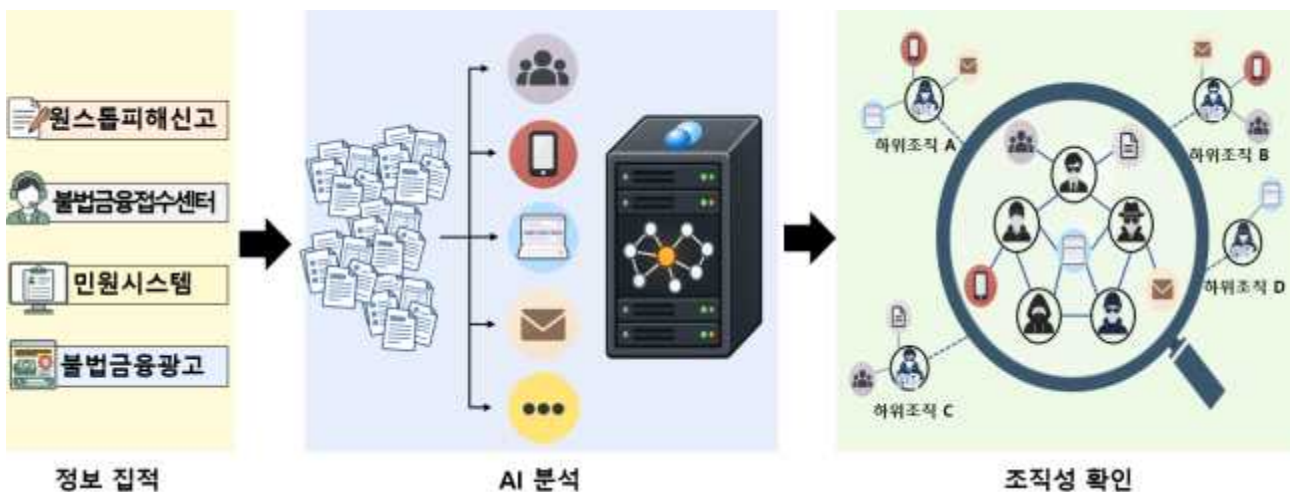
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

- ① 불법사금융, 망설이지 말고 **꼭 신고**하세요! 여러분이 남긴 기록이 다른 피해 사례와 이어지면 **조직을 추적**하는 **결정적 단서**가 됩니다!
- ② 피해를 신고할 때는 업자와 나눈 **대화**, **송금 내역**, **전화번호**, **광고 화면** 등 상대를 특정할 수 있는 **증빙**을 빠짐없이 **함께 제출**해 주세요!
- ③ 정식 등록된 대부업체라도 **선이자**를 현금으로 따로 **요구**하거나, **다른 업자**를 소개해 준다면 **즉시 신고**하세요!

I AI 분석체계 마련 : 따로 들어온 신고, 알고 보니 한 조직

- 불법사금융 일당은 점조직으로 은밀히 활동해, 신고를 건별로 대응하는 방식만으로는 조직범죄 접근에 한계가 있습니다.
 - 피해자들이 각각 다른 시기와 경로로 신고하다 보니, 한 조직이 저지른 범행이라도 서로 별개의 사건처럼 다뤄질 수밖에 없습니다.
- 이에 금융감독원은 집적된 불법사금융 정보 약 38만 건*을 AI로 분석해, 겉보기엔 무관한 사건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.
 - * 접수된 피해 신고·제보·민원 및 불법금융광고 정보 등
 - 여러 사건을 하나의 그림으로 엮어 조직 단위로 재구성하면, 범행의 전체 구조와 그 배후를 한층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.

<불법사금융 분석체계 흐름>



II 분석 결과 : 숨어 있던 피해와 제도권 업체의 민낯

1. 제2·제3의 '이실장'이 숨어 있었다

- 분석체계를 가동하자, 3월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던 '이실장'*처럼 한 조직이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이어 온 사례가 다수 확인됐습니다.

* '26.3.27. 「사채업자 이실장이 당신을 노린다」 보도자료 참조

- 이들의 범행은 그간 개별 신고로 나뉘어 있어 눈에 띄지 않았으나, 이번 분석을 거치며 하나로 묶이면서 윤곽이 드러났습니다.

□ 특히 ‘이실장’ 조직을 분석체계로 다시 추적한 결과, 확인된 피해 사례가 지난 3월 당시 파악했던 규모의 2배를 넘어섰습니다.

- 금융감독원은 일당이 피해자를 끌어들이는 경로까지 새로 파악한 만큼, 확보한 단서를 경찰에 제공해 핵심 조직원 검거에 힘을 보탬 계획입니다.

<대표사례 구조도>



2. 등록업체의 ‘두 얼굴’, 간판 뒤에서 사채 영업

□ 등록 대부업체가 불법광고·피해 신고와 직접 맞물린 사례도 확인됐으며, 이는 그간 수작업으로는 잡아내지 못했던 새로운 패턴입니다.

- 일부 업체는 여러 피해 신고와 불법광고에 반복적으로 등장해, 제도권의 신뢰를 방패 삼아 뒤로는 사채 영업에 가담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.

- 금융감독원은 대부업법 위반 소지가 큰 등록업체 수집 곳을 추려 피해자 면담과 현장 기동점검에 나서는 한편,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.

<등록 대부업체 연루 구조도>



- 이 밖에도 광고·대출·추심·영업을 나눠 맡은 '분업형' 조직들이 서로 얹혀 움직인 정황도 확인되어, 실태를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입니다.

Ⅲ 향후 계획 : 개별 신고를 '조직 수사'로

- 금융감독원은 확보한 단서를 관계기관과 적극 공유해, 드러난 조직에 대한 수사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.
 - 아울러 자체 AI 모델(LLM*) 도입으로 분석체계를 고도화해 수사 지원 범위를 넓히고, 조직 식별 정확도도 높여 나가겠습니다.
- * **L**arge **L**anguage **M**odel : 문장을 이해·생성할 수 있는 대규모 언어 모델
- 또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민생특별사법경찰이 도입되면 분석체계를 현장에 적용해 말단을 넘어 조직 전체를 겨냥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.
-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불법사금융을 뿌리 뽑기 위해 작은 단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.

IV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

① 금액이 적더라도 망설이지 말고 **꼭 신고**하세요! 여러분이 남긴 기록이 다른 피해 사례와 이어지면 일당을 **추적**하는 **결정적 단서**가 됩니다!

- 접수된 신고는 다른 사건 기록과 함께 분석되므로, **한 건의 제보**라도 여러 사례와 맞물리면 **배후 조직**을 밝히는 **실마리**가 될 수 있습니다.
- 금융감독원에 **원스톱**으로 신고하면 담당자가 불법추심 차단부터 채무자대리인 선임까지 피해구제 전 과정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② 피해를 신고할 때는 업자와 나는 **대화, 송금 내역, 전화번호, 광고 화면** 등 상대를 특정할 수 있는 **증빙**을 빠짐없이 **함께 제출**해 주세요!

- **증빙**이 **구체적**일수록 신속한 수사와 피해구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, 거래가 끝난 뒤에도 관련 자료는 **지우지 말고 꼭 보관**해 두세요.

※ 신고·상담 ☎ 금융감독원 홈페이지→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 ☎1332

③ 정식 **등록된 대부업체**라도 **선이자**를 **현금**으로 **따로 요구**하거나 **다른 업자**를 **소개**해 준다면 불법사금융을 강하게 의심하고 **신고**하세요!

- 계약서상 이율은 정상인데 실제로 지급 금액이 원금보다 **적다면**, 최고금리 규제를 피하려는 **불법 대부 수법**일 수 있습니다.
- 대부업체에 문의한 뒤 **낮선 번호**로 **대출 연락**이 **왔다면** 처음 상담한 곳도 불법사금융과 연루됐을 수 있으니, **상호와 함께 신고**해 주세요.

☎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://www.fss.or.kr>)